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작가’도 뭘 쓰느냐에 따라 과일 종류 만큼 세분된다. 드라마 작가, 웹툰 작가, 게임 작가, 동화 작가,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시인, 영화평론가, 저널리스트, 수필가……. 어떤 식으로든 등단 혹은 데뷔를 한, 권위를 얻은 제도권 작가들이다. 지명도로 따져도 다양한 작가가 존재한다. 텔레비전에 자주 혹은 이따금 나오는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뜨기도 하는, 페이스북 팔로워가 몇 명인, 무슨 상을 받은,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물론 ‘뭘도 보도 못한’ 작가들이 훨씬 많다.

우리나라에서 인세(책이 한 권 팔릴 때 그 책값의 10%가 작가의 몫이다)와 원고료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작가는 아무 명도 채 안 된다. 유명한 작가도 글세(인세+원고료)보다 ‘부가 수입’(원작

작가와 글쓰기의 자유

료, 강연료, 심사료, 출연료 같은)이 더 클 데다. 흔히 ‘전업 작가’는 일반적으로 ‘글세+부가 수입으로 근근이 먹고사는 작가’를 말한다.

드물지만 글세로부터 자유로운 작가들도 있다. 회당 얼마씩 받는다는 드라마 작가, 인터넷 문화 상거래의 선봉대 세 웹툰 작가…….

대개 작가는 따로 직업이 있다. 글과 가깝고 안정적으로 글을 쓸 환경이 되는 직업이 압도적이다. 교수, 교사, 언론인, 공무원, 법조계 종사자……. 하지만 그 환경 그 조건에서 어떻게 글을 쓰는지, 반대로 그 환경 그 조건에서 왜 글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 육체적으로 혹독한 직업에서부터 재벌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다. 작가 자신이 직업이 없다면 배우자가 있다.

글쓰기는 일기가 아닌 이상 누군가 읽고 재미를 느끼든, 감동하든, 메시지를 얻든, 뭘 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글이 돈과 연관되는 것을 꼭꼭이 싫어해도 인정은 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여 주는 까닭이다. 욕망 자체가 ‘프로 정신’이겠지만, 아직은 아마추어이면서도 제도권 진입을 꿈꾸는 작가가 무수히 존재한다.

‘엽서시문학공모전’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모전 정보를 취합해 놓았다. 짝짝 놀랄 데다. 이렇게 많은 출판사, 지자체, 사기업, 공기업, 학교 등에서 이토록 많고 적은 상금을 걸고, 이처럼 허다한 글쓰기 공모전을 열고 있다니. 그러한 공모전이 매년 시행될 수 있는 것은 매년 글을 써서 응모하는 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응모자는 청소년(학생 작가)이다. 여러 가지 까닭으로 청소년 대상의 백일장과 공모전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수한 비제도권 작가가 있다.

유사 이래 수천 년 동안, 글쓰기와 읽기는 문자를 만들고 소유하고 장악한 ‘특권 계급’(상류층)의 것이었다. 모든 계층이 고루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채 백여년이 되지 않았다. 세종대왕이 정음을 창제하신 게 1443년이지만 80% 이상의 한국인이 한글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1950년대였다.

모든 한국인이 ‘독자’가 되었지만, 작가는 오랫동안 상류층과 지식인과 등단자의 것이었다. 그밖의 사람들은 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써도 발표할 수가 없었다. 권력자와 상류층이 지면을 소유

했고, 그 지면에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자는 등단이라는 문학 제도를 통과했거나 권력집단·상류사회·지식인 사회의 일원으로 작가적 권위를 탐으로 얻은 이들이었다.

제도권 작가들과 제도권 진입을 열망하는 ‘예비 작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터넷의 발전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새 세상을 열었다. 말 그대로 종이밖에 없던 지면이, 저 사이버 공간에 무한히 존재하게 되었다. SNS의 무한 확장을 보라! ‘모두가 작가인 세상’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룬 가장 소중한 진보다. 누구나 마음껏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누구나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글을 발표할 공간을 가지는 사회! 아직 이런 자유를 못 누리는 나라라 사회가 해야 할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세세히 따지면 우리나라도 같길 멀다. 여전히 글쓰기의 자유가 부족하다. 제도권 작가 사회는 썩을 대로 썩었다. 비제도권 작가들이 ‘재미와 감동과 메시지를 겸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있는’ 좋은 글을 많이 생산하면 ‘작가’에 대한 인식은 새로워지고 글쓰기의 자유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기고



김택 광주 동구청장

경제 재조정으로 인구·행정 격차 해소를

자락 아래 너른 들녘은 삶의 터전을 뒤기에 제적이었다. 동구를 모태로 동심원처럼 조금씩 외연을 넓혀나간 것이 오늘날의 동구다. 1973년 구제(區制)가 실시돼 광주시 동구가 설치된 이래 1980년 동구의 일부가 분리돼 북구가 신설되고 일부는 떼어져 서구로 이관됐다. 광주를 대표하는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이 몰려 있어서도 그렇지만 동구를 ‘광주의 종가(宗家)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 같은 연유에서 기인한다.

한때는 인구 30만이 넘는 정치·경제·문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던 동구는 신도심이 광주 외곽으로 팽창하고 2005년 전남도청이 남양신도시로 옮겨가면서 도시 중심지 현상이 가속화되고 인구 유출이 동반됐다. 그러다 최근 정부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도시 개발·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펼쳐지며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인위적인 행정 구역 재조정 없이 지역민들이 겪을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구간 경제 조정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정치권

의 이해 관계가 얽히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역의 난제를 매듭 짓는 타이밍으로 6·13 지방선거 직후인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다. 지방선거 결과로 같은 정당 소속 단체장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데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의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구간 경제 조정은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은 물론 새로운 미래 성장의 청사진을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광주 자치구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동구가 35.7%, 남구 13.3%, 북구는 4.6% 줄어든 반면 광산구는 93.6%, 서구는 36.2%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5개 자치구는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은커녕 기형적인 비대칭의 굴레를 벗지 못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구간 경제 조정의 대의와 필요성에 대

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동안의 논의에서 시민들이 배제된 채 정치적인 유희를 따지는데 급급해 광주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를 흔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장,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정작 내부 현안에 대해서는 상생과 협력보다 지역 이기주의의 앞세워 대립과 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경우가 많았다. 이번만큼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더 큰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속의 민주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은 ‘최후까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족도, 가장 영리한 종족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족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대처해온 집단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는 얘기다. 신자유주의와 무한 경쟁 시대에 연대와 협동,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구간 경제 조정, 광주라서 가능하고 광주이기에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종교칼럼



중현 화순 용현사 주지스님

식빵 전문점

은 카페까지 겸하고 있다. 빵집이 더 이상 빵집이 아니다. 가게 이름은 분명 유명 브랜드 제과점인데 정작 빵을 찾으면 한참동안 진열대를 뒤져야 한다. 이런 현실을 비판하며 기존의 빵집과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 ‘식빵 전문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모양이다.

그러나 그 식빵 전문점은 곧 나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그 가게는 여러 종류의 식빵을 취급했는데 나오는 시간이 각각 달랐다.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원하는 식빵을 살 수 없었다. 그리고 보통 식빵보다 작는데 가격은 보통 식빵의 거의 두 배나 되었다. 그래서 몇 번 이용하다가 발길을 끊었다. 거의 일 년이 지나 우연히 그 식빵 전문점 앞을 지나치다 보니, 장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문을 닫은 지 꽤 되었단다.

신선한 호기심을 던지며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습내 식빵 전문점의 운명을 생각하다가, 문득 ‘식빵도 전문점 시대인데 그러면 사찰도 전문점 시대가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유하자면 기존 사찰은 기존의 빵집 같은 곳이다. 그 중에는 유명 브랜드 제과점처럼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꾸민 절도 있지만, 이제는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어수룩한 동네 빵집 같은 시골 절도 있다.

이름 있고, 경관 좋은 곳에 있는 사찰은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숙박업도 한다. 아예 ‘무당절’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절인지 무당집인지 분간하기 힘든 곳도 있다.

사찰의 기본에 충실하되, 기존의 사찰과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 무엇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당장 00선원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 00선원같은 식의 작명은 사찰의 기본은 수행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선 수행에 충실하지 않은 기존의 사찰과 구별하기 위해 스스로를 굳이 선원이라고 명칭한다. 한편 명상센터는 수행이 아니라 명상이란 말을 선택하고 있다. 명상이란 단어가 풍기는 힐링, 치유, 기존 삶의 조화 같은 이미지가 부각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명상 수행, 기수련, 요가 같은 불교외적인 것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오늘날의 사찰은 물리적인 수행 공간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전통과 풍부하고 다양한 인적, 물적, 문화적, 예술적, 사상적 자원을 보유한 불자들의 공동체로 발전했다. 00선원이나 명상센터는 웬지 기존의 사찰과 차별하는데 지중한 나머지, 많은 것들을 놓치는 듯하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사다가 파리바게뜨의 전신이 삼립제과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삼립제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식빵 자동 설비를 갖추어서 식빵을 대규모로 생산한 곳이었다고 한다. 파리바게뜨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식빵 전문점’이었던 것이다. 어릴 적, 동네 구멍가게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바로 그 삼립제과 식빵이 파리바게뜨의 예전 모습이었던 것이다.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여성을 대하다가 뜬금없이 순박하고 풋풋한 시골 처녀를 만난 것처럼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최근 들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파리바게뜨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홍보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서야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

파리바게뜨처럼 세련되고 화려하게 변모했지만 정체성이 희미해진 기업형 빵집도 있다. 반면 신선하게 등장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식빵 전문점도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가만히 있거나 해도 등 떠밀려서 변해가는 세상이다. 오늘날의 불교 역시 변하고 있고 또 변해야 한다.

사찰의 앞길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처럼 불교의 최일선에서있는 사람들이 개척해야 할 운명이다.

社說

민주 당권 지지자들의 ‘호남 공약’ 지켜보겠다

다음 주 토요일(25일)에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종반전에 가까워지면서 후보들의 호남 구애가 치열해지고 있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기호 순)은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전남 발전 공약’을 제시해 달라는 광주일보의 주문이 있기도 했지만 후보보다 지역의 핵심 현안 해결에 자신들이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 얻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강조하는 지역 발전 공약은 광주형일자리, 한전공단 설립, 에너지밸리 정착,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을 통한 문화수도 조성 등 지역민들이 애타게 바라는 현안 사업이다.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 송 후보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최일선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국 경제의 활력이 걸린 프로젝트라면서 관련 예산을 100% 챙기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도 대한민국 일자리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전공단 문제에 대해 송 후보는 에너지밸리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카이스트·포항공대와 함께 3대 명문 공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전공대를 기반으로 나주 에너지밸리와 광주 자동차산업을 결합해 광주·전남을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메카로 만들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은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성사가 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후보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동시에 선거 때마다 흔히 그랬듯이 당선을 위한 공약(空諾)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

이들이 호남 구애에 적극적인 이유는 표심을 좌우할 권리당원의 27%가 호남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권리당원의 40%가 호남 표나 마찬가지다. 후보들이 이런 호남 표를 의식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 약속을 하는지, 일단 당원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후보들 또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호남 유권자들이 끝까지 지켜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폭염…대대적인 도심 녹지 조성 절실하다

언제부터인가 광주는 여름만 되면 ‘광프리카’(광주와 아프리카 합성어)로 불린다. 광주는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더운 두 곳 중 하나인 셈이다. 올 들어 광주의 폭염은 더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의 폭염(최고 기온 33도 이상) 일수는 16일 현재 36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광주의 낮 최고기온 역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38년 이후 가장 높은 38.5도를 찍었다.

그러나 지자체는 도로에 물을 뿌리거나 도로변에 무더위 쉼터 천막을 치고 저소득층에 선풍기를 나눠 주는 것 말고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 정원이라도 잔디가 말라죽으면 주인에게 벌금을

물릴 정도로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녹지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 지자체들도 도심 녹지의 총량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빌딩 신축 시 옥상에 흙을 깔고 나무를 심는 옥상 녹지화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옥상 녹지화가 된 빌딩은 옥상 바로 아래층 실내 온도가 10도 가량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기후 온난화로 폭염이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가장 절실한 것은 도심 녹지 공간의 확대이다. 한때 시민운동 수준으로 진행됐던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막방’ TV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에서 ‘Mukbang’을 치면 검색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근래 공중파 TV나 종편 가릴 것 없이 유사 프로그램이 쏟아진다. 대놓고 ‘먹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게 식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해외여행에 막방을 끼워 넣기도 한다. 막방을 본 시청자들은 침을 삼키며 해당 음식이나 음식점을 찾곤 한다.

정부가 최근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큰 틀에서 비만을 각종 질병의 근원으로 지적하

‘먹방’ 규제 논란

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때 유행의 논란에 휘말렸다. 폭식을 부

추기는 방송이나 광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문구 때문이었다. 막방 애정자들은 ‘개인 취향을 정부가 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비만학회·대한영양사협회 등 학계와 관련 단체는 규제를 환영하는 쪽이다.

막방 논란을 지켜보면서 최근 작고한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15년 1월 기사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월 국 220-0515	문화사업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대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